

제 175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National Interests or Multi-agent Dynamics? Driving Forces behind Postwar Japanese and German Policies on Apology/Compensation

강연자: 구양모 (구 양 모) (노위치대학 정치학 조교수)

노위치대학 정치학에 소속되어 있는 구양모 교수의 세미나가 6월 16일 국제대학원 GL 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National Interests or Multi-agent Dynamics? Driving Forces behind Postwar Japanese and German Policies on Apology/Compensation' 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구양모 교수는 일본과 독일 양국 모두 제2차세계대전의 일로 인해 사과 및 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국가라는 위치에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사건으로 인해 자국을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독일의 경우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로 인한 가해자라는 인식이 강한 상태라는 다른 인식이 각국 국민들에게 심어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의 과거사 정책에는 변화가 있다고 구양모 교수는 설명하였다. 먼저 사과 및 배상 행동의 변화를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Deep Penitence'이며 이것은 정부를 통해 강제노역과 성 노예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가 직접 배상에 참여하는 형태다. 두 번째는 행동은 'Shallow Penitence'로, 국가 주체에 대해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하며 사과를 행하면서 배상도 시민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다. 세 번째 행위로는 'Impenitence'인데, 이 행위는 가해국가의 행위를 부정하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를 나타낸다. 그럼 이 3가지의 행위를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정책에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의 경우 1990년 중반까지 Impenitence의 상태로 지속하며 강제동원에 있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부터 2000년 대까지는 Deep Penitence로 변화되어, 명확한 보상으로 인해 가해국가로서의 사과와 배상을 행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Impenitence라는 행위를 취하고 있으며 성 노예에 관해서는 1992년 전까지는 Impenitence로, 1990년 대 중반에는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로 인해 Shallow Penitence의 행위를 행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2000년 대 중반까지는 Shallow Penitence를 유지하다가 간간히 Backsliding라는 사과와 배상을 소극적으로 혹은 부정하는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구양모 교수는 2가지 가설을 내세웠다. 첫 번째 가설은,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합한 '도구주의'로, 국가의 사죄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 이익과 연결된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을 이용해 두 국가의 과거사 정책을 보면, 일본의 경우, 일본의 안보는 국가 생존이 핵심이며 미일안보조약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 이 안보를 바탕으로 보면 1970년 후반까지는 안보이익, 경제이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Impenitence라는 행위를 취했지만, 1980년 후부터 중국의 개혁정치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중국,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1991년에서 1995년 사이 미일동맹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였기에 일본의 참회행동이 그 어느 때보

다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국가 생존과 국가 통일이 핵심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두면서 보면, 1950, 60년대에는 안보와 경제이익이 전혀 없었던 시기였으므로 비참회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하지만 1970,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소 사과를 하는 행동을 취하였고, 89년 통일로 인한 다른 유럽국가들의 독일의 세력 확장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해 독일의 적극적인 참회의 행동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가설은, '다자행위자 동원 모델'인데 이것은 가해국가들이 사죄하는 행동은 하는 이유는 초국적 연대가 강하고 진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 1950, 60년대에는 참회하는 행동이 많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관련 사건 보다는 당시 유대인 커뮤니티들은 학살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반면 1990년, 2000년 대에 Deep Penitence로 변화된 이유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강력한 학살에 대한 강력한 운동과 1994년의 슈레드총리는 이 이슈를 해결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독일이 참회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1945년에서 1980년까지 참회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참회를 해야 하는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그 이후부터 1995년까지는 보수단체들의 연대적인 반발이 적었기에 참회가 가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2가지의 접근법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보수적인 단체들의 강한 활동으로 인해 참회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어려운데 한가지의 가능성은 국가와 정부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강한 활동이 일본이 참회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것이다.

질의응답

질문: 독일의 경우 옛 나치 정책에 대해 주변국가들이 많이 비판하였다. 이것은 시민과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언급했는데 이것에 대한 영향도 있는가.

답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독일은 나치를 찬양하면 지금도 처벌을 받지만 일본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처벌하는 움직임이 없다. 인종차별에 관한 답변은 리서치를 해보고 알아보고 싶다.

질문: 강제동원과 성 노예에 있어서 한국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일본에서 만난 학자들은 65년 한일협정을 통해 보상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 한국과 중국학자들이 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 굳이 제시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질문: 모든 문제가 국가와 단체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위안부의 경우도 1990년대 이후 할머니들의 증언들로 인해 그 문제가 언급되었지만 결국에는 할머니들께서 개인의 주체가 되지 못하셨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독일의 경우는 법제화가 잘 되어있는 국가이다 보니 강제적인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회하는 그 과정도 잘 흘러갔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 국민들에 대한 강제동원은 사실상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문제이다. 하지만 가끔 극단적으로 천황의 사죄까지 바라는 단체도 있다.